



04차시 다문화정책의 이해

1. 다문화 정책의 모형

다문화 정책에 대한 모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차별배제 모형 둘째, 동화주의 모형 셋째, 다문화주의 모형. 각 모형 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차별배제 모형

차별배제 모형은 이주자를 노동자로만 받아들일 뿐, 내국인과 복지혜택, 선거권, 국적 등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임. 예를 들어, 독일에서 1960년대 외국인 노동자를 손님노동자라고 칭하고, 이들이 3년 동안만 머무를 수 있도록 한 것을 들 수 있음. 당시 독일정부는 원칙적으로 이들의 정착을 차단하려고 한 것임. 또 다른 예로, 한국의 고용허가제도를 들 수 있음. 한국의 고용허가제로 인해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는 일정 기간만 체류할 수 있음. 이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강제 귀국을 당함. 이는 한국 내 정착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동화주의 모형

동화주의 모형은 이주민들이 기존사회의 문화에 흡수하거나 동화하는 방식임. 동화주의 모형은 용광로 모형에 비유됨. 동화주의 모형을 주장했던 이유는 기존 주류사회계층이 이것이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임. 예를 들어, 1960년대 미국의 용광로 모형이 있음. 당시 미국은 새로 미국에 온 이주민뿐만 아니라, 원래 거주하고 있던 이주민에게도 미국문화에 흡수 될 것을 강요하였음. 또 다른 예로, 한국의 초기 다문화 교육 정책을 들 수 있음. 초기 다문화 교육 정책은 다문화가정 자녀 및 그 부모들에게 한국어 및 한국역사, 한국의 예절문화, 음식문화 등 한국문화 배우기를 강조하였음.

3) 다문화주의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은 새로 온 이주민들이 그들의 문화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그들이 문화적 정체성, 고유성을 지킬 수 있도록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임. 즉 이주민이 주류사회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주류문화와 함께 공존하도록 하는 것임. 다문화주의 모형은 샐러드볼에 비유됨. 샐러드 볼에는 사과, 오이, 감자, 옥수수, 아보카도 등 다양한 과일이 들어감. 드레싱에 의해서 섞이지만, 결국 씹게 되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다른 맛을 느끼게 됨. 이와 마찬가지로, 이주자든 내국인이든 드레싱이라는 법 및 정책에 의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살아간다는 것임. 예를 들어, 대표적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는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이 1970년대 이후 이주민 수용방식을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화하였음.

2. 다문화 정책의 현황

한국에서 다문화가 정책적 담론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교육부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음. 이후, 다문화 및 다문화 교육 정책은 범정부적 과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거의 모든 부처가 다문화 관련 정책을 내세웠으며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임. 사실 한국에 다문화교육이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은 1980년대임. 그러나 1980년대는 몇 몇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지금과 같이 주목받지는 못 했음.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음.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을 치렀으며, 1988년 이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임. 사실 외국인 노동자로 온 이들은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였음. 당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임금차별, 인권침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또한 1990년대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총각 결혼시키기 사업으로 국제결혼가정 수가 증가하였음. 국제결혼가정 관련해서는 한국적응 문제, 매매혼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그러나 한국사회는 이들의 문제를 단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볼 뿐,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음. 왜냐하면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핏줄, 한민족, 단일민족이라는 문화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임. 한국사회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위에 언급된 문제를 단순히 시민사회단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보았음. 또한 언어, 문화 등이 다른 이주민들을 단순히 잠시 한국에 머무르다 떠나는 외국인으로만 보았음.

한국에 본격적으로 다문화와 다문화교육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인 엄마와 미국 흑인 군인 사이에 태어난 풋볼 선수 하인즈 워드 선수의 내한과 그의 성장 배경이 알려

지게 되면서 부터임. 그리고 2006년 4월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다인종·다문화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중략) 질적 측면에서 이주자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며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등을 발표하였으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함에 따라 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서 부터임.

1) 관련 법

다문화 관련 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적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이 있음.

2006년 이후, 한국 정부는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 주도하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다문화를 하나의 현상으로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이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7년 제정되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에는 목적이 나와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의 용어가 설명되어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에는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등인 부모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를 종합하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교육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관련 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 나와 있음. 이 조항은 2011년 4월 3일에 신설된 것으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임.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2010년에 수립되어 2012년까지 추진되었음.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제1차 기본계획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다문화가족의 수요 및 여건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 4월부터 관련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였음.

| 구분 | 제1차 기본계획 | 제2차 기본계획 |
|----------|---|---|
| 추진 기간 | 2010~2012년 (3년간) | 2013~2017년 (5년간) |
| 과제 구성 | 5대 영역 61개 세부과제 | 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 |
| 추진 기관 | 11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경찰청, 공정위, 여성가족부 및 국무총리실) |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u>국방부</u> , 복지부, 고용부, <u>외교부</u> , 경찰청, <u>법통위</u> , <u>법원</u> , 여성가족부 및 국무총리실) |

그림 2 여성가족부(2012).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이었음. 목표는 ‘1.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2.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임. 추진과제는 총 다섯 가지로 첫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둘째,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셋째,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넷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다섯째,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공임. 각 과제 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는 1.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 2.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 확충
둘째,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는 1.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 2. 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사전정보 제공 확대 3. 자립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셋째,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는 1.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2.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3.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4.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5.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6.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 간 네트워크 강화

넷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은 1.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2.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3.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4.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다섯째,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공은 1.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2.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3. 지자체 일선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확대 4.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임. 목표는 ‘1.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2.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 구현’임. 정책과제는 총 여섯 가지로 첫째,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둘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셋째,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넷째,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섯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여섯째, 정책추진체계 정비임. 각 과제 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은 1.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2.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지지 환경 조성

둘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은 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 한국어능력 향상 3.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4.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셋째,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은 1.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2.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3. 소외계층 지원 강화 4. 피해자 보호

넷째,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는 1.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2. 직업교육훈련 지원 3.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4. 사회참여 확대

다섯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1. 인종·문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2.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3.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4.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5. 다문화가족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여섯째, 정책추진체계 정비는 1.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2. 다문화 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3.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3. 다문화 교육 정책의 주요 내용

한국정부는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발표를 시작으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새로운 사회구성원들이 한국사회에 통합하기 위하여 각종 다문화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06년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음. 이 사업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정규교육으로부터 방치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 소외 방지 대책을 목표로 다문

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의 구축을 위해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다문화가정 지원 실천 사례 나눔 대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시도하였음.

2007년 다문화 교육 정책의 목표는 첫째, 언어·문화장벽의 해소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조기에 습득하여 학교교육 및 사회생활에서의 소외감과 이질감을 극복하는 사회통합에 기여함. 둘째, 사회적 귀속감과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다문화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확대를 통해 문화적 편견을 극복함. 사업내용으로는 학교 교육력 제고 정책 시행 및 다문화이해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중심의 다문화교육 강화로 설정하였음.

2008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운 것임. 여기서 기존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유치원생으로 낮추어, 서울 경기 등 9개 지역에서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취학 전 다문화가정 자녀들까지 인근 유치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2009년에는 다문화 교육 지원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및 연계·활용 강화를 위하여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등에서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교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하였고, 예비교사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해 10여개 대학에 ‘다문화교육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 둘째,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하여 10명 이상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한국어 교육과 교과학습 지도 등을 46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과 교사나 대학생, 퇴직 교원 등이 멘토가 되어 다문화가정 자녀를 연결하는 멘토링을 지원하거나, 기초학습과 특기적성, 문화체험 등을 방학 중 집중캠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셋째, 일반가정 학생의 다문화 이해 교육 및 다문화가정의 강점발굴을 위한 지원으로서 학교 재량활동·특별활동에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 체험활동 등을 통한 감수성 제고를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

2010년은 2009년도의 맞춤형 다문화교육지원사업의 폭을 더욱 확장하여 ‘배움과 이해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역량강화, 다문화교육기반 강화 및 다문화 이해 확산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음. 이는 급증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이들의 조기 적응과 교육적 성취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으로써 이들의 언어·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주

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계획되었음.

2011년에는 한국과 부모 출신국 간의 핵심 교육인재로 육성하는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계획하였음. 글로벌 브릿지 사업은 부모 출신국이 베트남, 필리핀, 중국인으로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임. 학생들은 리더십 프로그램, 세계시민 교육프로그램, 자아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국제교류 및 봉사프로그램 등을 20시간에서 60시간씩 받게 됨.

2012년에는 모든 학생이 다양성을 이해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 발표되었으며, 한국어교육과정이 2009 개정교육과정에 포함되었음.

2013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학급의 확대 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3년 10월 22일에 개정되었음.

2014년에는 중도입국 학생 적응촉진을 위한 예비학교 80교로 확대하였으며,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120교를 운영하였음. 다문화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확대하였으며, 글로벌 브릿지 사업, 직업교육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원하였음.

2015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일반학생과 교원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미취학아동을 위한 다문화 유치원 30개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음.

2016년에는 다문화 유아에게 언어 및 기초학습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30개의 다문화 유치원을 60개로 확대 운영하였음. 중도입국학생 및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예비학교를 기존 100개교에서 124개교로 확대 운영하였음. 학생의 다문화 수용도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 중점학교를 180개교 운영하였음.

2017년 현재, 다문화 유아를 위해 유치원을 90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중도입국학생 및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예비학교를 160개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또한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대학생을 다문화가정 학생의 멘토로 선발하여 중도입국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다문화가정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지역 내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3개의 연구학교를 운영할 계획임. 또한 다문화 중점학교를 200개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임.

이외에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많은 다문화교육 정책이 있음. 교육부에서 다문화 교육 지

원 정책은 매년 발표되고 있음.